

막 오른 22대 첫 정기국회... 예산·입법 대격돌 예고

오늘 개원식... 2특검 4국조·내년 예산안 심사·檢 견제 입법 등 산적
여야, 창 vs 방패 대결... 광주·전남 초선, 정치적 보여줄 첫 시험무대

22대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을 다루게 되며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격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을 거치며 초선 비율이 높아진 광주·전남 정치권에게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지역 예산 확보 등 정치력을 보여줄 첫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번 첫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내년 예산안 조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가성비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의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입법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저출생 극복·의료 개혁·미래 먹거리 발굴·지역 균형 발전·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내수 활성화 법안 102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법안 27개 등 165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2특검 4국조·검찰 겨냥 법안' 등 갈등 요소도 수두룩하다. 야당은 '채상병 사망', '방송 장악',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권위 조사',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거센 공격을 버리고 있으며, 여당은 '정부 엄호' 기조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2특검·4국조' 모두에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채상병 특검법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제삼자 특검 추진', '수사 대상에 제보공작 의혹 포함' 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 채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정 브리핑에서 내놓은 연금개혁도 정기국회에서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특위를 꾸려 신속히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연금개혁 핵심인 보험료 인상은 언급조차 회피하고 국회 논의만 재촉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정부는 어설픈 언급 말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尹 정부, 정치 보복의 끝은 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양부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60%는 미성년자"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텔레그램 사태로 딥페이크 피해가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청소년들이 범죄 위험성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 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 (315명)는 10대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큰 비중이다.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62.0%로 올랐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음지와 폐쇄성 탓에 수사마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인재풀 확대... '집권 플랜' 가동

인재 영입·정책자문위 구성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를 맞아 인재 풀을 넓히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지난 26일 당 인재위원장에게 정성호 의원이 임명되면서부터다. 정 의원은 오랜 기간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통했으나, 이 대표 체제에서 공식적인 당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자신이 당직을 맡으면 오히려 이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보여왔으나, 이번 인재위원장은 고사하지 않았다. 인재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총선 인재 영입을 위해 직접 맡았던 당직이기도 하다. 따라서 바통을 이어받은 정 의원은 2027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이 대표를 도울 인재 수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은 1일 통화에서 "정 의원이 당장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나설 인재를 찾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물론 대선을 겨냥한 인재 풀을 확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맞물려 주목되는 또 다른 움직임 중 하나는 정책역량 강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 산하에 민주당 집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 의원의 인재 확보 작업과 함께 당 정책 역량 강화는 이 대표의 대권 도전 계획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문가 그룹을 통해 대선 준비에 나선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선을 1년 반 정도 앞둔 2016년 7월부터 교수 그룹을 포함한 전문가들을 만나 싱크탱크를 구성했다. 이 전문가 집단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종민 '새로운미래' 탈당

김종민 의원(세종갑·3선)이 1일 새로운미래를 탈당했다. 유일한 현역 의원이 김 의원의 탈당으로 새로운미래는 원의 정당이 됐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는 믿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며 "총선 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근본적 재창당으로 가고자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많이 고민했지만,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탈당을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새로운미래와 지역구인 세종시 유권자를 향해서는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분간 당적 없이 의정 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정준호, 국가폭력 피해 실태와 과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북구갑) 국회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 피해(도시) 진상규명 실태와 과제-국가의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에서 5·18 기념사업법 제정과 관련하여 학계·연구자·시민사회·기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국가폭력 피해(도시) 진상규명의 실태를 진단하고, 국가의 간섭 없는 기념사업의 방향에 대해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5·18 진상조사위 활동이 종료함에 따라 지속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하여 종합적인 기념사업법 제정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5·18 진상규명과 기념사업법 제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다. 이에 국가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사회적 대원칙의 수립과 국가 간섭없이 국가폭력 피해의



진상규명과 기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거사 청산 제도의 재구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마련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는 진상규명과 기념사업 사례 평가와 역사 퇴행 실태 그리고 제도적 대안 모색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김희송 전남대 5·8연구소 교수,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토론회 전 전회위 위원이자 '국가폭력 전문가'인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해서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이형숙 추모연대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